

정청래 “여야 ‘잘하기 경쟁’ 간절히 소망... 민생협의회체 성과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제도약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다”며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이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돕겠다”며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자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보수가 경제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가”

“이재명 정부 ‘ABCDEF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

“한미정상회담, 단순한 성공 아닌 역대급 성공”

“한반도 평화, 北 호응해야... 외환 세력 완전히 끊어내야”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 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실패와 경제포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데이터법 진흥법,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다.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쾌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국화로 넘어왔다”며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하다”며 “강력한 국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

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한다”며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9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이주 인권단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외사슬·족쇄 체포’ 방식을 규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선 오전 민주노동·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흥동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오후엔 이주인권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과 대미 투자 중단, 반이민정책·체포구금 철폐 등을 요구했다.

박석은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외사슬 사용은 가혹행위이자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투자를 요구해놓고(노

노동·이주단체 “美 구금 한국인 외사슬 체포는 가혹행위... 사과해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잇단 기자회견

“투자 요구하지만 비자는 제한... 사과해야”

동자들에게) 이런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엄미경 민주노동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한국 노동자들이 중범죄자들과랑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됐다”며 “(민주노동은) 이 치욕적 행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를 중단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오후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우디야 라이 이주노동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직원으로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데 중범죄자처럼 체포됐다”며 “투자는 하라고 하고 비자는 제한하는



미세관단속국 규탄 제 이주인권단체 지지

제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외사슬 체포 가혹행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 “美 구금 사태 큰 책임감... 합리적 제도개선 신속 추진”

“우리 국민 조만간 귀국 예정... 깊은 위로 말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어 “관계 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 세심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집게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체류·고용 관련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뉴시스

당정, 정청래-우상호 입장차 논란에 “검찰개혁 이견 없다”... 갈등 불씨는 여전

대통령실 “큰 틀에서 공감대, 세부적 내용은 조율 중일 뿐”

민주 “후속 조치 당에 주도권”... 보완수사권 등 갈등 가능성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 9일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한 신문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불리의 후속 작업을 논의하던 중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민주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정 대표는 “당도 참여하겠다”고 한 반면 우 수석은 “당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보다 구체

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위당정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참여 관련) 토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추후 정부 임명을 한다고 해도 당정대가 서로 조율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당 특위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들이 있지 않다. 그런 자선도 총리실 산하에 함께 들어가 당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은 정부가 세심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주도권이 주어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당초 당도 범정부 검찰개

혁추진단에 참여하려 했으나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후 잇따르는 여러 실무 조치에 집중하는 만큼 당이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당정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견을 모은 것과 달리 추후 검찰개혁추진단이 살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둘러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당정 의견차가 존재한다. 실제 ‘검찰개혁’ 완성까지 당정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장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수사·기소 불리 원칙이 확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보완수사는 필요하지만 누가 어느 정도의 문제”라며 “수사와 기소를 불리하는데 보완수사는 할 수 있으면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제25회 영랑불갑산 싱싱대취축제

2025. 9. 26.(금) ~ 10. 5. 일

영랑 불갑산 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요법) 9. 26(금) 오후7시
- ‘그럴때 있으시죠?’ (김제동) 10. 4(토) 오후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야(夜)행
- 브랜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렌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주최/주관 : 영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랑로, 영랑군의회, 한국수업협회, 신원중앙회, 영랑연극협회, 동명초등학교